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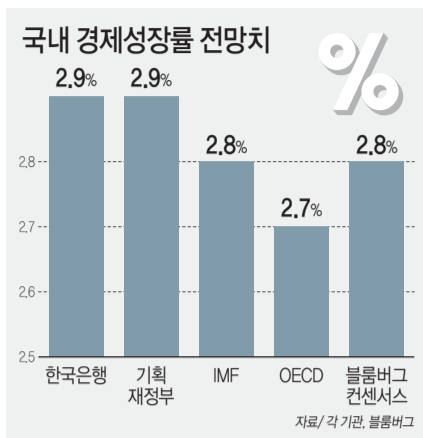
빠질만큼 빠졌다... 고위험 '레버리지 펀드'에 뭉치돈

일주일새 ETF에 1524억원 몰려 레버리지 '몰빵 투자' 자제해야 이벤트 잇따라... 시장 흐름 관건

코스피지수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인덱스 펀드 투자자들은 여전히 지수 상승 쪽에 '베팅'하고 있다. 증시가 급락하자 상대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을 쫓는 레버리지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 자금이 불나방처럼 몰려들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2100선으로 밀리면서 주식시장의 조정 우려가 커졌지만 반등을 기대하며 저가 매수를 노린 투자자가 많다는 의미다.

15일 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레버리지 펀드 설정



액은 6조834억원이다. 이중 1321억원이 최근 1주일 새 유입됐다.

글로벌 시장이 충격에 흔들리자 주가 반등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은행·증권사 등의 적극적인 영업도 자금 유입을 부추겼다.

레버리지펀드는 주가가 하락하거나 옆

걸음 칠때는 손실이 커지지만, 주가가 오를때 1.5~2배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도 최근 1주일 새 1524억원이 새로 유입됐다. 3개월 동안 유입된 자금은 1조818억원에 달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레버리지펀드의 경우 상승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만큼 하락장에선 손실도 크기 때문에 '몰빵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건은 실제 투자자 예상대로 시장이 움직일 것인지 여부다. 현시점이 바닥이라고 생각해 과감히 ETF 매수 버튼을 눌렀지만 자칫 지수가 더 하락한다면 상당한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 당분간 지수가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며 방향성이 없는 '랜덤워크' 흐름을 보일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이번 주 국내의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크다.

15일(현지 시간)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중국이 환율 조작국에 이름을 올릴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충격은 메가톤 급이다.

하나금융투자 소재용 이코노미스트는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지난 상반기에 환율 조작국 지정 기준을 낮출 수도 있다는 언급이 있었던 만큼, 만일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아시아 시장의 불안과 자금이탈로 위안화의 약세와 이를 방어하기 위한 인민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슈이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어 한미간 금리 격차를 우려한 한국은행이 1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안타증권 정원일 연구원은 "10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 성장 경로에 있어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일제히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단기 저점권에 다다른 것으로 본다. 확정실적 기준 PBR 0.93배(금융위기 이후 저점)인 코스피 2100 포인트 전후에서 지지력 테스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맞벌이 소득 765만원·외벌이 529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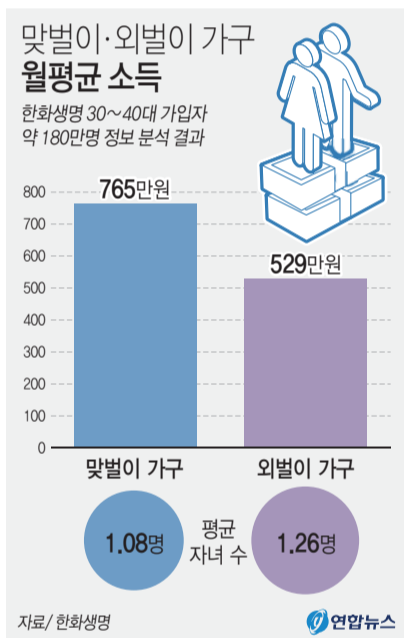
한화생명 3040 가입자 분석 보험료 지출 규모는 비슷해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765만원, '외벌이 가구'는 529만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화생명은 자사 30~40대 가입자 약 180만명의 정보를 분석해보니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가구당 자녀는 맞벌이가 1.08명, 외벌이가 1.26명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은 "직장과 육아를 함께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에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맞벌이 가구는 월 소득의 3.65%(27만9225원)를, 외벌이 가구는 4.82%(25만4978원)를 보험료로 지출했다. 맞



벌이와 외벌이의 보험료 지출 규모가 비슷한 셈이다.

한화생명은 "외벌이 가구가 보험의 필요성을 더 느낀 결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소득 하위 그룹(맞벌이 연 7000만원 이하, 외벌이 연 4000만원 이하)은 외벌이 가정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했다. 중위 그룹(맞벌이 8000만~1억1000만원, 외벌이 5000만~1억원)도 마찬가지였다. 상위 그룹만 맞벌이의 보험료 납입액이 더 많았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신용대출을 써 본 경험은 소득 하위 그룹에서 외벌이가, 소득 상위 그룹은 맞벌이가 더 많았다.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계약대출과 신용대출의 활용 경험이 줄었다. 반면 부동산 관련 대출은 소득이 높을수록 활용 경험이 늘었다.

/연합뉴스

'집값 담합센터' 운영 일주일

부녀회·인터넷 카페 등 신고 절반이 서울

정부가 집주인과 중개업자의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해 '집값 담합센터'를 운영한 지 일주일 지났다. 담합 신고건수 절반이 서울 지역이었으며 아파트 부녀회, 인터넷 카페 등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흥근 의원(서울 중랑구)이 한 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집값 담합센터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달 5일~11일까지 집값 담합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33건 중 16건이 서울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고가담합 신고가 25건이었으며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행위, 거래 금액 허위신고가 8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대상자별 접수현황을 보면 아파트

부녀회 및 입주주민협의회 등 단체와 중개업자가 11건씩 기록했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은 5건이었다.

한국감정원 측은 "신고내용을 검토 후 가격담합 의심내역은 국토부에 통보하고 필요 시 정부합동 단속 및 공정위·검경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박흥근 의원은 "최근 온라인 등 담합을 통한 집값 부풀리기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봤다"며 "집값 담합과 같은 주택 시장 교란 행위를 엄벌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담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신화 기자

전자상거래 AI 프로젝트 70% "매우 성공적"



2020년 기업의 60% AI 사용할 것

세계적인 IT 자문기관 가트너(Gartner)가 전자상거래에 적용된 인공지능(AI)의 대부분이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자상거래 조직 중 70%는 자사의 AI 프로젝트가 '매우' 또는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답했다.

가트너는 전자상거래에서의 AI 관련 도입, 가치, 성공, 어려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AI를 사용 중이거나 시범 운영 중인 전자상거래 기업 307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중국의 기업 관계자들 중 전자상거래 관련 전략적 의사 결정에 참여했던 이들을 선정하여 진행했다.

응답자 중 75%는 자체 평가 기준으로 두 자릿수의 성장을 이뤘다고 답했다. AI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는 고객 만족, 매출, 비용 절감이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고객 만족, 매출, 비용 절감 부문에서 각각 19%, 15%, 15%의 개선을 달성했다고 대답했다.

응답자들의 43%는 솔루션을 스스로 개발하거나 서비스 제공업체의 솔루션을 변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다 큰 성공을 거둔 기업들의 63%는 상용 AI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전자상거래에 AI를 적용하는 프로젝트 개발에 평균 130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답했다. 보다 성공적인 기업들의 52%는 개발에 100만달러 이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는 100만달러 이상 200만달러 이하를 사용했고, 500만달러 이상을 사용한 이들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트너는 2020년까지 전자상거래 기업 중 최소 60%가 AI를 사용할 것이며, 전자상거래 매출의 30%는 AI 기술에 힘입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트너 리서치 디렉터 샌디 셴은 "전자상거래는 AI 기술이 발전하기에 매우 적합한 분야"라며, "고객 응대와 백 오피스 운영에 대한 다차원적인 데이터가 풍부한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잔액 기준 코픽스 13개월 연속 상승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잔액 기준으로 13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은행연합회는 9월 코픽스가 잔액 기준 1.90%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신규취급액 기준은 1.83%로 0.03%포인트 상승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로써 잔액 기준 코픽스는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7~8월에 전월 대비로 하락했다가 반등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코픽스가 오르면 이에 연동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일제히 오른다.

은행연합회는 "잔액기준 코픽스는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지만, 신규취급액 기준은 잔액기준보다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며 "코픽스와 연동하는 대출을 받을 때 이런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nyusoul91@

벡스코서 국내 우수 기술·표준 소개

국내외 표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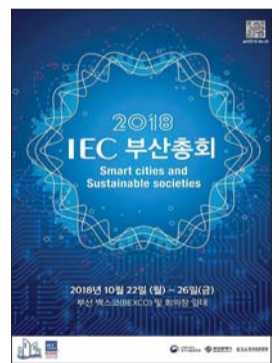
국토교통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국제 스마트시티 표준 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스마트시티 국제표준이 제정되도록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우수 스마트시티 기술 및 표준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시티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주제로 개최되는 '2018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부산 총회'와 연계해 추진된다.

최근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스마트시티의 안정적인 구축과 확산을 위해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등 3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는 연구모임을 구성해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를 논의 중이다. 아울러 각국은 자국의 상품 수출에 유리한 표준을 만들고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움직임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해 지난 4월 정부와 표준화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스마트시티 표준 정책 패널'을 구성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엔 스마트도시 표준화 포럼을 구성하고, 2013년 20건의 핵심기술 및 연계규격에 대한 표준을 제정했다. 지난해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관련 7건의 표준을 제정해 올해 5월부터 민간기업의 통합플랫폼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IEC 스마트시티 위원회 의장인 마이클 멀퀸(Michael Mulquin)이 IEC의 스마트시티 표준화 추진현황에 대한 기조연설을 한다. 국내외 표준화 전문가들은 스마트시티 우수사례, 국제 표준화 동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 또 지난해 국내표준으로 제정된 스마트시티 표준 중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참조모델 및 요구기능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술표준 사례로서 국제 표준으로 정식 제안할 계획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